

2026년도

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



국 방 부

|| 목 차 ||

I. 개 요	1
II. '26년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추진과제	2
III.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	
① 군인 기본권 보장 지평 확대	4
② 군인의무 준수체계 확립	17
③ 고충해소와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	24
④ 양성 평등한 조직기반 강화	32

I. 개 요

□ 문서의 의의 및 목적

「'23~'27 군인복무기본정책서」에 제시된 정책과제들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'26년도 시행계획'으로, 군인의 기본권, 군 기강, 복무여건 향상 등을 통해 '선진병영문화 창출' 및 '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 육성'에 기여

□ 정책 추진 및 관리

○ 제대별 책임

구 분	내 용
국방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본정책의 연도별 '시행계획' 작성 및 하달 • 법령개정, 예산확보, 정부협업, 전문연구 필요과제 추진 • 연도별 정책추진 성과분석 및 차기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• 군인복무기본정책 수정 소요 검토 및 대안 수립 * 성과분석 결과, 국방정책의 변화, 각군의 건의 등을 반영
각군 본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도별 '기본정책 시행계획'에 관한 '세부시행계획' 수립 • 과제 시행을 위한 규정, 방침, 지침 수립 후 예하부대 하달 • 연도별 정책추진 성과분석 및 차기 연도 세부시행계획에 반영 * 세부시행계획 추진성과 분석은 참모총장 주관으로 실시 후,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
작전사령부 이하 야전제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방부, 각군 본부에서 지정한 '행동화 과제' 실천 • 사·여단급 이상 제대에서 과제추진 성과분석 후 보고

○ 법령 제·개정 및 예산확보

- 기본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령 제·개정 소요를 식별한 후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계 법령에 반영
 - * 장병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, 타 법률과 상충되는 사항, 대내·외로 민감한 사항 등은 전문가 조언 및 철저한 법률적 검토 후 추진
- 정책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
 - * 소요예산의 편성을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 및 정책과제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적극 홍보

Ⅱ. '26년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추진과제

〈 대과제 〉	〈 중점 추진과제 〉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① 군인 기본권 보장 지평 확대</p>	<p>① 청년 장병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여건 구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장병 급식의 질 향상 및 제도 개선 2) 전투효율성 향상을 위한 피복 품질 향상 3) 국민 생활 수준에 맞춘 군 주거환경 개선
	<p>② 국가에 대한 헌신에 보답하는 보상체계 확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및 직업군인 수당 개선 2) 군 사망자 유가족 지원 개선
	<p>③ 장병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가·외출제도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장병 휴식권 보장 실태 현장점검 및 개선과제 발굴 2) 장병 휴가·외출 사용 장려 문화 조성
	<p>④ 장병의 생애 설계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·자기개발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창업 교육·멘토링 확대 및 창업경진대회 활성화 2) 군 경력기반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 3) 생산적인 군 복무를 위한 자기개발 여건 보장
	<p>⑤ 공백없는 군 의료체계 구축으로 건강권 보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원격진료 확대를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2) 응급환자 후송역량 강화 3)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역량 강화 및 정신건강분야 발전 4) 숙련된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양성 5) 군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
	<p>⑥ 여가생활 여건 보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장병 문화예술 향유권을 확대하여 여가생활의 질 향상 2) 휴식과 편의성을 고려한 직영 군 휴양·편의시설 환경개선 3) 군인가족 복지지원 질적·양적 확대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② 군인의무 준수체계 확립</p>	<p>① 올바르고 굳건한 국가관, 대적관 등 체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장병 안보의식 고취 2) 정신전력 교육체계 개선 및 인프라 구축
	<p>② 불합리한 관행, 부조리, 사적지시 근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군 내 가혹행위·성폭력 예방정책 행동수칙 교육 2) 불합리한 관행·부조리 등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3)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법제화
	<p>③ 엄정한 기강 확립 및 사고 예방 활동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 및 진단 2) 군 기강 저해행위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 3) 군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

< 대과제 >	< 중점 추진과제 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 고충해소와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</p>	<p>① 장병의 복무 적응을 위한 심리치유 역량 강화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간부 민간 심리상담 지원 확대 2)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및 상담 역량 강화 3) 군 심리검사 효과성 제고 4) 예방적 차원의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도입
	<p>② 공백없는 대내·외 인권침해 구제절차 확립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군 내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에 대한 법제화 추진 2) 군인권보호관 제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협력 강화 3) 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강화 4) 국방부-인권위 공동 인권교육 기획·협력 5) 군인권교육협의회를 통한 인권교육 개선 및 협업 강화
	<p>③ 공정한 군 사법제도 운영을 위한 민·군 협력관계 강화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수사협의회를 운영을 통한 민·군 협력 강화 2)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 전면 시행 및 대국민서비스 강화 3) 군 사법제도 개선 관련 관계기관 의견조회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 양성 평등한 조직기반 강화</p>	<p>① 국방 양성평등 정책의 발전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양성평등 정책기반 체계 강화 및 민·관·군 협력체계 활성화 2) 조직 내 여성 대표성 강화 및 여군 인사관리 발전 3) 여성인력 확대에 따른 근무여건 보장
	<p>② 일-가정 양립의 근무환경 조성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군 특성을 고려한 일-가정 양립 지원제도 개선 2) 군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
	<p>③ 현장 중심의 성희롱·성폭력 예방 활동 및 피해자 보호 지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현장 중심의 성희롱·성폭력 예방대응 추진 2) 피해자 보호·지원체계 강화 3) 양성평등 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 4)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
	<p>④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활성화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성폭력 등 사건 징계위원회 운영 개선

Ⅲ.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

① 군인 기본권 보장 지평 확대

- ① - ① 청년 장병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여건 구축
- ① - ② 국가에 대한 헌신에 보답하는 보상체계 확립
- ① - ③ 장병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가·외출제도 개선
- ① - ④ 장병의 생애 설계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·자기개발 지원
- ① - ⑤ 공백없는 군 의료체계 구축으로 건강권 보장
- ① - ⑥ 여가생활 여건 보장

1 - ①. 청년 장병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여건 구축

□ 개요

- 병영생활의 필수인 의·식·주에 대한 청년 장병들의 높아진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급식 및 피복·장구류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노후하고 협소한 병영생활관을 개선
- 간부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복무만족도를 높이고, 군인 본연의 임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

□ 현 실태

- 병력감소·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조리병 부족 및 숙련도 저하에 대응하고, 장병들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군 급식 제도개선 필요
-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 및 전투 효율성을 향상을 위한 피복류 개선 필요
- 장병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장구류의 품질을 지속 보장하기 위한 정책 시행 필요
- 독립된 생활여건 보장, 주거 품질 제고 등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군 주거정책 추진 필요
 - * 국가인권위 : 생활관 1인당 수용면적을 10㎡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('22. 12월)

□ '26년 추진계획

- 장병 급식의 질 향상 및 제도 개선
 - 병력 감축에 따른 인력운영 제한사항 해소 및 민간전문성 도입을 통한 급식 질 향상을 위해 군 급식 민간위탁 확대 추진
 - 급식 질 향상 및 조리병 업무경감을 위해 급식혁신 시범사업 추진
 - * 일품요리 위주 식단구성, 간편조리법 등을 활용한 조리편의성 향상
 - 장병 선호품목 급식 확대를 위해 기본급식비 인상 지속 추진(1일 15,000원)
 - 군 직영식당 대비 부족한 민간위탁 식당의 식재료비 보전을 위한 민간 위탁급식 사업보조비 신규 편성 추진(1일 2,000원)

○ 전투 효율성 향상을 위한 피복 품질 향상

- 여러 피복을 겹쳐 착용하여 착용성과 활동성이 저하되었던 기존 7종의 방한피복 및 우의류를 경량성, 활동성, 보온성이 향상된 고품질의 4종으로 통합·개선('26.3월부터 각군 실제 보급)
- 장병 생존성 강화를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(BMRP) 제도 시행
 - * 수명도래 시점이 1~2년 남은 방탄복, 방탄헬멧, 방탄판에 대해 전문기관(국방기술품질원)이 주기적으로 기술시험을 실시하여 방탄성능 유지 여부를 점검, 방탄물자 품질 지속 보장
 - * '26년 대상시료 확보 및 일반검사, 기술시험 및 결과분석, 등급판정 등 추진

○ 국민 생활 수준에 맞춘 군 주거환경 개선

- 4인실 병영생활관 개선 추진(계속)
 - * '23년 개정된 「국방·군사시설기준」을 적용하여 병영생활관을 위생시설(화장실·샤워실)을 포함한 4인실 (1인당 생활면적 10.78㎡, 4인실 기준)로 개선
 - * 연도별 신규 착수 물량 : '22년 14개동 → '23년 44개동 → '24년 62개동 → '25년 61개동 → '26년 8개동
- 간부숙소 1인 1실 기준 확보(계속)
 - * '26년 3,418실 확보(소요 116,103실 대비 99%), '27년 상반기까지 100% 확보 추진
- 간부숙소 부족 시(노후개선 등) 전세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병행
 - * 「군인복지기본법」 개정 추진
- 국민평형(32평형) 관사 확보(계속) * '26년 302세대 확보(착수 기준 / 1,294억원)

□ 입법계획

- 「군인복지기본법」 개정('26년) * 관사 부족 시 전세이자 지원을 간부숙소 대상까지 확대

□ 추진 일정

주요 내용	'26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장병 급식의 질 향상 및 제도 개선	• 민간위탁 확대(연중) • 급식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(2월), 사단급 적용(4월~10월), 전군 확대계획 수립(12월) • 기본급식비 인상, 민간위탁 급식 사업보조비 신설을 위한 기재부-국회 협의(연중)	
② 전투 효율성 향상을 위한 피복 품질 향상	• 전투피복체계 품질개선품 보급 시작(3월~) • 방탄물자 신뢰성평가(시료확보 및 일반검사) 추진(1~3월)	•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추진 * 기술시험 수행 및 결과분석(~8월) * '26년 등급판정 및 '27년 대상 선정(10월)
③ 국민 생활 수준에 맞춘 군 주거환경 개선	• 병영생활관 생활실을 4인실로 개선(계속)	• 병영생활관 생활실을 4인실로 개선(계속) • 「군인복지기본법」 개정

① - ②. 국가에 대한 헌신에 보답하는 보상체계 확립

□ 개요

-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, 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제적 보상체계 개선
- 군 사망자 유가족 예우 강화를 위해 사고발생 초기부터 유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, 유족이 원하는 실용적 지원방안 마련 추진

□ 현 실태

- 군 복무에 종사하는 다양한 계층에서 임무의 특성,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처우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
 - 병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'25년까지 병장 기준 월 205만원(자산형성프로그램과 결합) 수준으로 지원
 - 간부의 경우 직업군인으로서 군 특수성과 복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당 현실화 등 합당한 수준의 경제적 보상 필요
 - * 특히, 초급간부, 각군 핵심전투인력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수 분야 처우개선 필요
- 군 사망자 발생 시 유족지원전담관 임명, 장례 지원, 유가족 심리치료비 지원 등 유족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노력 필요

□ '26년 추진계획

-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및 직업군인 수당 개선
 - 초급간부 복무의욕 고취를 위한 보수 인상
 - * '27년까지 하사 1호봉 기준 월 평균 보수 300만원 수준 달성
 - 중견간부 직무수행여건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 추진
 - * 핵심 전투/전문인력 유출방지를 위한 수당 신설 및 인상
 - 민간과의 보수비교를 통한 군 간부의 적정 보수목표 설정
 - * KIDA 부여과제 “간부 복무 특성·여건을 고려한 경제적 지원방안 연구”에 포함

○ 군 사망자 유가족 지원 개선

- (심리치료) 사망 발생 초기부터 전문적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“심리치료비 지원사업’ 추진(계속)

* 현재 해군만 편성된 ‘심리치료비 지원사업’ 예산을 ’27년 예산 편성 시 전군지원사업으로 반영 추진

- (장례비 인상) 복무 중 사망한 모든 장병의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장례비 인상을 위한 예산 증액 반영

* ’25년 인상(550만원→700만원)된 장례비 현실화를 위해 ’27년부터 800만원으로 추가 인상 추진

□ 입법계획 : 없음

□ 추진 일정

주요 내용	’26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및 직업군인 수당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’27년 수당조정요구 추진방향 보고(3월) • ’27년 수당조정요구 소요 종합 및 정책실무회의(4월) • ’27년 수당조정요구 사업설명(6월) • 간부 복무 특성/여건을 고려한 경제적 지원방안 연구(KIDA, ~11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당조정요구안 관계부처 협의(7월~12월) * 인사혁신처, 기획예산처
② 군 사망자 유가족 지원 개선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’27년도 유가족 지원 예산편성 요구(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’27년도 유가족 지원 예산편성 반영(12월)

① - ③. 장병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가·외출제도 개선

□ 개요

-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휴가·외출제도 개선과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문화 조성을 통해 장병 휴식권 보장 추진

□ 현 실태

- 장병 휴식권 보장 실태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통해 미흡 분야를 식별·개선하고,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휴가 제도 개선과제 지속 발굴 필요
- 휴가 사용여건 보장을 지속 강조하고, 현재 다소 저조*한 '병 평일 일과 이후 외출'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필요

* 장병 인식조사(KIDA) 결과, '병 평일 일과 이후 외출'을 2일 실시하는 병사는 50% 이내(46.1%)

□ '26년 추진계획

- 장병 휴식권 보장 실태 현장점검 및 개선과제 발굴
 - 병영문화혁신 통합솔루션 지도방문 시 대상부대별 휴가 보장 실태 사전 진단 및 미흡 분야 개선(반기 단위)
 - 현장점검 시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휴가 제도 개선과제 지속 발굴
- 장병 휴가·외출 사용 장려 문화 조성
 - 간부 휴가 시행 강조지침 시달 지속(반기 단위)
 -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 참가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'병 평일 일과 이후 외출' 활성화 지침 시달(2월)

□ 입법계획 : 없음

□ 추진 일정

주요 내용	'26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장병 휴식권 보장 실태 현장점검 및 개선과제 발굴	· 휴가 여건 등 장병 휴식권 보장 관련 병영문화혁신 통합솔루션 지도방문(3~5월)	· 휴가 여건 등 장병 휴식권 보장 관련 병영문화혁신 통합솔루션 지도방문(9~11월)
② 장병 휴가·외출 사용 장려 문화 조성	· 간부 휴가 시행 강조지침 하달(1월, 4월) ·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'병 평일 일과 이후 외출' 활성화 지침 시달(2월)	· 간부 휴가 시행 강조지침 하달(7월, 10월)

①-④. 장병의 생애 설계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·자기개발 지원

□ 개요

- 장병의 생애 설계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 및 자기개발 활동 지원으로 군 복무기간을 학업·경력의 단절이 아닌 생산적 활동기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만족도 제고

□ 현 상태

-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장병들의 생산적인 군 복무여건 조성 및 창업역량 강화 필요
 - * 장병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창업경진대회와 연계 필요
- 전역예정장병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
 - * 장병들의 취업 선호기업 등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확대 필요
- 군 복무가 '학업·경력의 단절'이라는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 복무 주기별 맞춤형 자기개발 필요

□ '26년 추진계획

- 창업 교육·멘토링 확대 및 창업경진대회 활성화
 - (교육/멘토링) 실질적인 창업 인식개선 및 이해를 위한 인식교육 및 창업 아이템 선정 및 준비방법 등 집중 멘토링 실시
 - * 창업인식교육 : 400회, 2H / 창업멘토링 창업관심 600팀, 경진대회 진출 100팀 지원
 - (창업경진대회) 장병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육성, 전역 후 실효성 있는 창업이 가능하도록 국방창업경진대회 실시
 - * 각군 리그 통해 국방창업경진대회 개최,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와 연계
- 군 경력기반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
 - '국방 일자리 발굴 추진단'을 통한 공공분야 및 민간 우수기업 등 일자리 확대

○ 생산적인 군 복무를 위한 자기개발 여건 보장

- 軍 복무 중 학점 취득 기반확대를 위한 ‘대학 학점 인정제’ 참여대학 확대
 - * 원격강좌 학점취득 인정 : '25년 189개 → '26년 192개
 - * 군 복무경험 학점 인정 : '25년 100개 → '26년 103개
- 군 내 자격검정(국가기술·국방 분야) 취득 여건 보장
 - * (확대) 응시료·실습 집체교육 지원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 인원 확대(1.2만명→1.4만명)
 - * (신설) 새로운 산업 수요 및 장병 관심 고려 국방분야 국가자격 신설(14개→16개 종목)
(2개 종목 : 국방무인기정비사, 방호기술관리사)
- 다양한 자기개발 학습 여건 보장
 - * (e-러닝) 장병e음을 통해 어학·자격증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공
 - * (맞춤형 e북 지원) 전자책 구독·구매 및 종이책(학습도서) 구매 비용을 1인당 연간 최대 64,000원까지 지원(자기부담률 20%)

□ 입법계획 : 없음

□ 추진 일정

주요 내용	'26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창업 교육·멘토링 확대 및 창업경진대회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방창업경진대회 공고(2월) • 각군 리그 진행(2월~5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방창업경진대회 시상식(9월) • 범부처 창업경진대회(9월~12월)
② 군 경력기반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방일자리발굴단 추진(2월~12월) • 취업박람회(5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NCS, 내일배움카드 등 관련 고용부 협업(~12월)
③ 생산적인 군 복무를 위한 자기개발 여건 보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 참석(1월) • '26년 전반기 국가기술자격검정(2~6월) • '26년 전반기 대학원격강좌 수강신청(2월) • 군 복무 중 학점인정 참여대학 확대 협조(3월) • 맞추어 맞춤형 e북 지원 개시(2.4) 및 지원제도 홍보 및 이벤트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6년 하반기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(6~11월) • '26년 하반기 대학원격강좌 수강신청(8~9월) • 군 복무 중 학점인정 참여대학 확대 협조(7월) • 맞추어 맞춤형 e북 지원(~11.30), 지원제도 홍보 및 이벤트 실시

① - ⑤. 공백없는 군 의료체계 구축으로 건강권 보장

□ 개요

- 필요할 때 언제든지 치료·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심으로 진료여건 개선하고, 숙련된 군 의료인력 확보를 통해 양질의 군 의료서비스 제공

□ 현 실태

- 군부대는 전방 및 해·강안 등 격오지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, 진료 접근성 개선 및 신속한 응급후송역량 확보 필요
- 군은 외상환자의 비율이 높은 만큼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역량 강화 필요, 트라우마 등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진료 수요 증가
- 현재 군 의료는 단기군의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(약 92%), 의대생 현역병 입영 선호 등 대외요인에 의해 군의원 규모 감소 예상
- 감염병 위기 발생시 신속한 상황 판단과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 지속 확보, 데이터에 기반한 군 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구축 필요

□ '26년 추진계획

- **원격진료 확대를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**
 - 격오지 및 함정 원격진료체계 추가 소요 검토('26. 3월)
 - * 격오지 12개소(육군), 함정 19대(해군)에 대한 추가 소요 검토
 - 원격진료체계 확대·노후 장비교체를 위한 계약 및 장비 설치(~'26. 12월)
 - * 격오지 원격진료시스템 13개소 노후교체 추진(육군)
- **응급환자 후송역량 강화**
 - 의무후송전용헬기 전력화 사업추진(계속)
 - * (2차/4대) 전력화 장비 양산계약('25. 10월), 양산 사업관리('25. 11월~'28년)
 - * (3차) 육군훈련소 지원을 고려한 후방지역 전력화 소요제기('26. 6월 / 합참)
 - 소방청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통한 응급후송능력 확충
 - *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강화(상황공유 체계 구축, 항공후송절차 합동훈련 등)
- **외상환자에 대한 진료역량 강화 및 정신건강분야 발전**
 - 국군외상센터의 민간인 외상환자 진료 확대에 따른 인력 보강
 - * 국군외상센터 민간인 환자 현황 : '23년 94명 → '24년 388명 → '25년 482명
 - * 인력보강을 위한 연도 및 중기부대계획 소요제기('26년)

- 국가 단위 외상센터 체계 내 편입 추진
 - * 군 특수성을 고려한 편입기준 예외조항 신설 등 관련부처(보건복지부 등) 협의
- 민간 의료기관 협력 및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한 정신건강 진료지원체계 강화
 - *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한 정신과적 응급진료 대응체계 구축(~'26. 6월)
 - * 간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('26. 3월 부)

○ **숙련된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양성**

- 장기군외관 확보 및 양성 방안 검토
 - * 장기군외관 인력양성모형별 편익분석 및 군병원 발전방안 연구('25. 6월~'26. 2월/한국의과대학협회)
- 군 의료인력 복무 유인 제고를 위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
 - * 복무연장지원금 신설,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등 추진

○ **군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**

- 감염병 발생 시 신속, 정확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군 통합 감염병 감시지원체계 구축 및 전력화
 - * '26년 사업 예산 23.41억 반영 및 '27년 예산 편성 추진(총사업비 109.38억)
- 역학조사 인력 등에 대한 감염병 대응 전문교육 지속 실시
 - * '25년 감염병 대응 전문교육 190명 이수 및 두창백신 접종전문가 40명 양성
- 생물테러 위기 대비, 전투력 보존을 위한 예방·치료 능력 구축을 위한 3세대 두창백신의 평시접종 확대 추진
 - * '25년 3세대 두창백신 평시접종 최초 시행

□ **입법계획**

○ 「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」 개정

* 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대상 확대 및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위임 권한 조정

□ **추진 일정**

주요 내용	'26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원격진료 확대를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	• 격오지 및 함정 원격진료체계 추가 소요 검토(3월)	• 원격진료체계 확대노후 장비교체를 위한 계약 및 장비 설치(12월)
② 응급환자 후송역량 강화	• (2차) 전력화 양산 사업관리('25. 11월~'28년) • 소방청의무사 항공의무후송 절차 합동훈련 시행(2월)	• (3차) 후방지역 전력화 소요제기(6월~/합참) • 공동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조(7월~)
③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역량 강화 및 정신건강분야 발전	• 국가 단위 외상센터 체계 편입 관계부처 협의(지속) • 군 정신건강 발전 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시행(1~2월) • 민·군 연계 정신과적 응급 진료체계 구축(~6월) • 간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확대(3월~) • 민·관·군 정신건강 협의체 추진(4월, 6월)	• 인력 확충을 위한 연도부대계획 건의(9월) • 민·군 연계 정신과적 응급 진료체계 운영 및 효과분석(~12월) • 민·관·군 정신건강 협의체 추진(9월, 12월)
④ 숙련된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양성	• 장기군외관 확보 관련 연구용역(~2월)	• 복무연장지원금 신설,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예산 편성 추진(~12월)
⑤ 군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	• 전군 통합 감염병 감시지원체계 구축 완료(6월) • 군 의료인력 감염병 대응 전문교육 실시(연중)	• 3세대 두창백신 평시접종(7월) • 전군 통합 감염병 감시지원체계 전력화(7월~)

① - ⑥. 여가생활 여건 보장

□ 개요

- 디지털 시대 흐름에 맞추어 병영 내 독서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후 온라인을 통한 문화예술 체험 등으로 장병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
- 장병 독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책 읽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문화예술 공연 지원,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 체험교육 제공으로 장병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

□ 현 실태

- 도서 선정 및 보급 시 장병 선호분야 적극 반영 필요
- 학습, 휴식, 소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병영도서관 환경 개선으로 안락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인 생활 공간으로 정비 필요
- 격오지, 도서지역 등 문화소외지역의 최소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공연 지원, 장병들의 문화예술 체험교육 기회 제공 필요
- 노후화로 이용여건이 열악한 직영 군 휴양시설 및 군 마트의 환경 개선과 장병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 확대 필요

□ '26년 추진계획

- 장병 문화예술 향유권을 확대하여 여가생활의 질 향상
 - 병영 독서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책 읽는 병영문화 조성
 - * 장병 선호 반영 도서 선정·보급(정기간행물, 진중문고 등), 진중문고 전자책·오디오북 서비스 대상·규모 확대(서비스 대상 간부로 확대, 전자책·오디오북 20종 이상 보급 목표), 병영도서관 장서 확대, 노후 병영도서관의 서가대 보충, 물품 교체 등 환경개선
 - 장병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
 - * 국군교향악단 순회연주회, 격오지 부대 대상 힐링 콘서트, 런치 콘서트 등 군악 연주회를 통해 장병 정서순화 및 사기 진작, '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(M.공감)'과 '장애인 예술단체 부대 방문 공연' 등 수요자 맞춤형 공연 제공으로 장병 정서함양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

- 수요자 맞춤형 온·오프라인 문화예술 체험교육 제공
 - * 부대 특성·여건에 맞는 문화예술 교육단체 선정, 자율적인 체험교육 시행, 각군 집중정신전력교육 또는 부대별 가용시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개, 일과 후 원하는 시간에 휴대전화, PC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문화예술 강의 콘텐츠 제공(장병·군무원 대상)

○ 휴식과 편의성을 고려한 직영 군 휴양·편의시설 환경개선

- 군 휴양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시설 다양화
 - * 송정콘도, 각군 회관 리모델링 및 청간정 콘도 주변 부지에 캠핑장·글램핑장 건립
- 국방대 체력단련장 개장 등 각급부대 체육활동 여건 개선
 - * 풋살장 31개소 신축(67억원), 체력단련기구 등 비품 교체(83억)
- 격오지 영내마트 무인화를 통한 이용여건 개선 및 인터넷쇼핑몰 활성화
 - * 격오지부대 무인마트(10개소) 및 자판기(20개소) 시범운영 등
 - * 인터넷쇼핑몰(Wa-Mall) 입점물품 확대 및 앱 개발을 통한 접근성 향상

○ 군인가족 복지지원 질적·양적 확대

- 군인자녀 자율형공립고 1호 학교, 영천고등학교 개교('26. 3. 3부)
 - * 군인자녀에게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제공, 중견간부 자녀교육문제 어려움 해소
 - * 경기 송담고등학교('28년), 강원 화천고등학교('30년) 순차적 개교 예정
- 군 관사지역 문화여건 개선을 위한 작은도서관 지속 운영
 - * '25년 기준 67개소(누적) 설치·운영 중
- 군 가족 힐링프로그램 지원 : 162가족('25년) → '26년 지속 지원
- 문화, 여행 등 분야별 민간 제휴서비스 확대
 - * '25년 하나투어, 언더아머 등 민간업체 제휴 지속 유지, '26년 스타벅스 등 신규 제휴 업체 확대 추진
- 거주여건향상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군인자녀 기숙사 운영방식 개선
 - * 노후 및 입사율 저조 지방 기숙사 폐쇄(해운·무열학사 '26. 1. 1부), 행복 기숙사로 대체 운영 검토
 - * 수요가 많은 수도권 기숙사 신·증축 추진

□ **입법계획 : 없음**

□ 추진 일정

주요 내용	'26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장병 문화예술 향유권을 확대하여 여가생활의 질 향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추진계획 수립(1월), 수요 조사 및 부대 매칭(~4월) · 장애인 예술단체 부대 방문공연 추진계획 수립(1월), 수요 조사 및 부대 매칭(~5월) · 병영도서관 지원 예산 재배정(2월) · 진중문고 전자책오디오북 추가 16종 서비스(3월) · 진중문고 전자책오디오북 구입계약(1차, 6월) · 병영도서관 도서 구입, 환경개선(각군, 5~12월) · 국군교향악단 순회연주회, 찾아가는 연주회 등 군악 연주회 실시(3월~11월) · 국방부 주관 병영문화예술 체험 및 소개교육, 문체부 주관 예술누림, 온라인 문화예술 강의 콘텐츠 시행(3월~11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군교향악단 순회연주회, 찾아가는 연주회 등 군악 연주회 실시(3월~11월) · 국방부 주관 병영문화예술 체험 및 소개교육, 문체부 주관 예술누림, 온라인 문화예술 강의 콘텐츠 시행(3월~11월) ·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추진(~12월) · 장애인 예술단체 부대 방문공연 추진(~12월) · 병영도서관 도서 구입 및 환경개선 점검(9월, 12월) · 진중문고 전자책오디오북 이용률만족도 조사(12월) · 진중문고 전자책오디오북 구입계약(2차, 12월)
② 휴식과 편의성을 고려한 직영 군 휴양·편의시설 환경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송정콘도 재개장(3월) · 격오지 영내 무인마트 및 자판기 설치(5월) · 인터넷쇼핑몰 앱 개발 설계(2월~'27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방대 체력단련장 개장(후반기 내) · 부대 복지회관 개보수(~12월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터넷쇼핑몰 입점물품 확대(지속) · 풋살경기장 신축(지속) 	
③ 군인가족 복지지원 질적·양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군인자녀 자율형공립고 영천고 개교(3.3) · 전반기 군 가족 힐링프로그램(4~6월) · 전반기 군인자녀 기숙사 운영토의(2월) · 스타벅스 민간 제휴 업무협약식(상반기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군인자녀 자율형공립고 개교 예정 학교 (경기 송담고, 강원 화천고) 현장 확인(7월) · 하반기 군 가족 힐링프로그램(9~11월) · 하반기 군인자녀 기숙사 운영토의(7월)

Ⅲ.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

② 군인의무 준수체계 확립

- ② - ① 올바르게 굳건한 국가관, 대적관 등 체화
- ② - ② 불합리한 관행, 부조리, 사적지시 근절
- ② - ③ 엄정한 기강 확립 및 사고 예방 활동 강화

② - ①. 올바르게 굳건한 국가관, 대적관 등 체화

□ 개요

-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, 국가관, 군인정신 등 정신무장을 바탕으로 군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는 '군인다운 군인'을 육성

□ 현 실태

- 군인의 헌법적 가치 수호와 군 정체성 확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
- 엄중한 안보상황 하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대적관 확립 필요

□ '26년 추진계획

○ 장병 안보의식 고취

• '민주주의와 헌법수호' 장병 교육 지속

- * 학교교육 전 과정에 '헌법과 국방관계법령'(2H), '민주주의와 헌법수호'(2H) 필수교육 반영
- * 사관학교 '26년 교과과정에 '헌법과 민주시민'(3학점) 필수과목 반영
- * 부대교육 시 헌법 토크콘서트, 현장견학 등 장병 참여형 프로그램 전면 도입

• 국방부, 외부전문가 초빙강연 지원(5~12월, 약 4,300회)

- * 간부교육 확대(사단급→여단급 참모부 간부로 확대, 학군단 신규 반영 등)
- * 장병 만족도와 교육 효과 고려, 융합식 교육 비중 확대(68% → 84%)

• 국방정신전력원, '찾아가는 정신전력 아카데미' 지원(~11월)

- * 정신전력 전문교관(6명) 집중 운용하여 국가관·대적관·군인정신 함양 도모(연 200회)

○ 정신전력 교육체계 개선 및 인프라 구축

• 주요 계기일, 안보상황 등을 반영한 정신전력교육 자료 제작 지원

- * 구한말 의병-독립-광복군-국군으로 이어지는 국군 정체성 교육 강화

• 신기술 접목 정신전력교육 체계 구축

- * 육군훈련소 제2파노라마관 구축(~2월) 및 해군 정신전력교육관 구축 추진(~12월)

□ 입법계획 : 없음

□ 추진 일정

주요 내용	'26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장병 안보의식 고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외부전문가 초빙교육(5월~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교육업체 계약(4월), 전군 초빙교육 지원(~12월) · 전반기 '찾아가는 정신전력교육 아카데미'(2~7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격오지 부대, 학교기관 방문 교육 · 국방정책토론회(4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군 정훈장교 워크숍(7월) · 한독 국방교류협력(8. 31.~9. 7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'군의 민주적 통제와 제복입은 민주시만 세미나 및 관련 기관 방문 · 후반기 '찾아가는 정신전력교육 아카데미'(9~11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격오지 부대, 학교기관 방문 교육
② 정신전력 교육체계 개선 및 인프라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육군훈련소 제2파노라마관 구축(~2월) · 안보상황, 아전요구를 반영한 교육자료 제작 지원(연중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지휘관 직접교육용 영상자료 제작(월1회) · 국군 정체성 교육(연중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도산 안창호 서거 88주년(3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군 정체성 교육(연중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(8월), 면암 최익현 순국 120주년(11월) · 교육자료 적시 지원(연중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도끼만행사건 50주년(8월), 한글날 100주년(10월) · 해군 정신전력교육관 구축(~12월)

② - ②. 불합리한 관행, 부조리, 사적지시 근절

□ 개요

- 군 내 '가혹행위 및 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화' 추진 및 일선부대 현장점검 및 개선을 통한 병영 내 잔존 하는 불합리한 관행·부조리 척결,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 보장

□ 현 실태

- 군 내 가혹행위 및 성폭력 등 예방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유사한 사건이 지속하여 발생
- 병영 저변에 잔존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등을 실질적으로 경감 할 수 있는 각종 교육 강화, 현장점검 및 개선 필요
- 현행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은 “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(제25조)”고 규정하고 있으나, 명령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부재

□ '26년 추진계획

- 군 내 가혹행위·성폭력 예방정책 행동수칙 교육
 - 각군 지휘관 및 주임원사 보직 전 소집교육 시 '군 내 가혹행위·성폭력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' 내면화 및 행동화 실천 강조
 - 각종 사고예방 교육과 병행하여 행동수칙 생활화 교육 시행
 - 전·후반기 현장방문 시 장병들의 행동수칙 숙지 여부 점검 병행
- 불합리한 관행·부조리 등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
 - 군인권개선추진단 내 통합점검팀(인권, 성희롱·성폭력, 병영문화, 양성평등)을 구성하여 각군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, 부조리 등 현장점검
 - 군기사고가 다수 발생한 부대를 선정하여 사전 부대진단 및 현장점검을 통해 지휘관에게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 '병영문화혁신 통합솔루션' 제공

○ **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법제화**

- 내·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에 신설하기 위한 방안 마련
- 국방위 법안소위 개최 시 국방부 검토의견* 제출

*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다수의 의원안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의 실시

□ **입법계획**

○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개정 추진(의원입법)

* 의원발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국방부 검토의견 제시 및 토의

□ **추진 일정**

주요 내용	'26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군 내 가혹행위·성폭력 예방정책 행동수칙 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휘관·주임원사 보직 전 행동수칙 교육 • 행동수칙 강요안 및 시각자료 활용 장병 교육 • 병영문화혁신 통합솔루션 현장방문 시 핵심 행동수칙 숙지 여부 점검 	
② 불합리한 관행·부조리 등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반기 병영문화혁신 통합솔루션 제공을 위한 현장방문(4~5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후반기 병영문화혁신 통합솔루션 제공을 위한 현장방문(9~11월)
③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법제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(2~3월) • 국방부 검토의견 수정·보완(상반기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방부 검토의견 국방위 법안소위에 제출(개최시) • 「군인복무기본법」 개정 지속 추진

② - ③. 엄정한 기강 확립 및 사고 예방 활동 강화

□ 개요

- 군 기강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고, 군 기강 저해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징계제도 개선 추진
- 군 기강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

□ 현 상태

- 군 기강 확립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불법도박, 성범죄, 폭행 등 주요 사건·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대국민 신뢰도 저하 야기
 - * 군 기강 협의체 활성화, 제대별 현장진단 시스템 보완, 군 내 불법도박 실태조사 분석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
- 군기교육 등 병 징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추진 필요
 - * 군기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, 감봉 확대 등 개선방안 추진
- 군 임무 다변화에 따른 현장 위험성 증대와 첨단 기술 도입으로 신종 사고 위험 및 대형 사고 취약성 가중
 - *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, 이를 확인·점검하여 이행상태를 확인

□ '26년 추진계획

-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 및 진단
 - '사고예방 및 군 기강 확립 활동 지침' 하달(1월)
 - * 연간 지침에 근거하여 제대별 자체계획 수립, 주기적 강조기간 운영(분기별 1주 이내)
 - 군 기강 확립 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주요 현안토의 및 대책 추진(지속)
 - * 분기 단위 정기협의체, 월 단위 실무계통 수시협의체 시행
 - 제대별 현장진단 시스템 내실화를 통한 현장 중심의 활동 강화(반기)
 - * 사전 부대진단을 통한 진단결과 제공 등 통합솔루션 개념 적용 下 병영문화혁신 현장방문
 - 군 내 불법도박 실태조사 분석 및 예방대책 보완(3월)
 - * '25년(6~12월) 실시한 군 내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 분석(~2월)을 통해 예방대책 보완(3월)

○ **군 기강 저해행위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**

- 군기교육에 대한 실효성 검증을 통해 개선방안(감봉 확대 등) 추진(~12월)
* 현장실사(~3월), 각군 의견수렴(~5월), 정책 결정 및 법령 개정(~12월)
- 마약류 관련 비위, 음주 동승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「군인 징계령 시행규칙」 상 징계기준 신설(~2월)
* 마약류 관련 비위, 직장 내 괴롭힘, 스토킹, 딥페이크 성 비위, 음란물 유포, 자전거 음주운전, 음주운전자 은닉·방조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징계양정기준 마련
- 엄정하고 통일성 있는 징계처분을 위해 「국방부 군인·군무원 징계업무 처리 훈령」 상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 및 구체화(~6월)
- 병 감봉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봉급 감액비율 상향 추진(~12월)
* 감액비율을 現 1/5에서 간부와 동일하게 1/3로 상향하는 「군인사법」 개정안 마련

○ **군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**

- ‘안전점검의 날’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강조 및 안전의식 고취 활동 강화(매월 4일)
* 안전사고 예방 활동 사례 및 계절/시기별 중점사항을 전파하여 실효성 있는 점검 수행
** 대민지원 지휘통제 일원화를 명시한 국방부 지침 및 안전매뉴얼 준수를 위한 행동화 숙달
- 군 시설물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·해소(2~6월)
- 안전·보건 확보의무 이행 실태점검을 통해 행동화 확인·점검(5월, 10월)
- 국방안전 분야 협력 및 발전 방향 도출을 위한 ‘국방안전 심포지엄’ 개최(9월)
* 민·관·군 협력으로 국방 안전 분야 발전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

□ **입법계획**

- 「군인사법」 개정 : ~ '26. 12월 * 징계제도 개선방안 확정 시 개정 추진

□ **추진 일정**

주요 내용	'26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 및 진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고예방 및 군 기강 확립 활동 지침 시달(1월) • 1, 2분기 사고예방 및 군 기강 확립 강조간 운영(3, 6월) • 군 기강 확립 정기협의체(2, 5월) • 군 기강 확립 수시협의체(1~6월) • 병영문화혁신 통합솔루션 지도방문(4~5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, 4분기 사고예방 및 군 기강 확립 강조간 운영(8, 12월) • 군 기강 확립 정기협의체(8, 11월) • 군 기강 확립 수시협의체(7~12월) • 사고예방 교육자료 제공(수시) • 병영문화혁신 통합솔루션 지도방문(9~11월)
② 군 기강 저해행위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군기교육 실효성 검증을 위한 현장실사(2~3월) • 군기교육 관련 각군 의견수렴(4~5월) • 「군인·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」 개정(~6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군기교육 개선방안 관련 정책결정(6~10월) • 개선방안 확정 시 「군인사법」 개정 추진(~12월) • 병 감봉처분 관련 「군인사법」 개정 추진(~12월)
③ 군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‘안전점검의 날’ 운영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점검 및 행동화 숙달(매월 4일) • 집중안전점검(2~6월) • 안전·보건 확보의무 이행 실태점검(5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안전·보건 확보의무 이행 실태점검(10월) • 국방안전 심포지엄 개최(9월)

Ⅲ.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

③ 고충해소와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

③ - ① 장병의 복무적응을 위한 심리치유 역량 강화

③ - ② 공백없는 대내·외 인권침해 구제절차 확립

③ - ③ 공정한 군 사법제도 운영을 위한 민·군 협력관계 강화

③ - ①. 장병의 복무적응을 위한 심리치유 역량 강화

□ 개 요

- 장병들의 복무 적응과 사고 예방을 위해 군 심리검사의 식별기능을 강화하고, 간부 대상 민간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인지도·활용도 제고 및 사업확대 기반 마련
- 증원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문 상담역량을 제고하여 장병의 상담 접근성 및 효과성 제고

□ 현 실태

- 대내·외 상담제도 활용, 주기적 심리검사 등을 실시 중이나, 자살 등 사건·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제도의 효과성 제고 필요
- 장병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의 접근성을 제고하고, 장병 정서에 미치는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상담관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역량 강화 필요
 - * 각종 사고 목격 또는 재해 현장 투입 등 트라우마 발생을 선제적으로 개입·해소 필요
- 現 '군 자살예방 종합시스템'을 보완하기 위해 정신적 어려움이 발생하기 이전에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예방적 접근 강화 필요

□ '26년 추진계획

- 간부 민간 심리상담 지원 확대
 - '26년 사업 조기 시행('25. 12. 23.~)으로 지속적인 상담여건 보장
 - '찾아가는 심리특강', 홍보 등 간부의 상담 인식개선 및 접근성 향상
 - * 스트레스 관리 등 특강·심리상담·피지컬 케어(10개 부대), 홍보물 배포·이벤트(연중)
 - 간부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활용 강조 하달(2월)

○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및 상담 역량 강화

- '26년 증원 반영된 인원(40명)을 각군, 국직부대에 배정 및 채용
 - *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위원회 심의(2월), 채용(4월~), 배치(7월)
- 적시적·안정적 상담기회 확보를 위해 상담관 단계적 증원 지속 추진
- 상담 주제별·수준별 직무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·적용
 - * 각군·상담관 등 의견수렴(~2월), 프로그램 설계 및 도입(2분기)
- 상담 효율성, 접근성,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매뉴얼 작성(~9월)
 - * 상담관 임무 절차와 기준, 홍보, 내담자별 관리방안 등 종합적 가이드라인

○ 군 심리검사 효과성 제고

- 간부 심리검사 신뢰도 개선을 위한 자율기술형 검사 문항개발(~9월)
 - * 문항개발(3~4월) → 심리검사 시스템 탑재(4~6월) → 분석 및 활용방안 검토(~9월)
- 군 심리검사체계 운영 고도화 및 정책활용 방안 연구(~11월)
 - * △ 복무적합도검사 2.0의 운영체계 점검 및 유용성 평가, △ 검사체계 고도화, △ 신체검사·입영부대 분류 시 검사판정 기준 최신화 등
- AI 기반 군 심리검사 및 장병 지원체계 사업추진(사업 선정 시)
 - * AI 기반 통합분석 모듈 개발, 위험도 예측 및 의사결정 지원, 다차원 심리검사 도입, 상담 연계 자동화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며, 국방AI 담당 부서에 사업소요 제기 중

○ 예방적 차원의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도입

-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완화·극복할 수 있도록 '국군 멘탈 트레이닝(피트니스) 프로그램' 도입 추진(3월~)
 - * 스트레스 조절, 집중, 회복 탄력, 감정조절 등을 강화할 수 있는 군 복무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(KIDA)
- 국방부 차원의 조직 운영을 통해 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정책을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수행
 - * '자살예방·정신건강 증진 통합위원회'를 구성('26.4월), 군 자살예방 종합시스템과 건강 증진 정책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·평가·개선

□ 입법계획 : 없음

□ 추진 일정

주요 내용	'26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간부 민간 심리상담 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민간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 홍보 및 이벤트(3월 5월) · 간부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활용 강조 하달(2월) · 찾아가는 심리특강(상반기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민간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 홍보 및 이벤트(8월, 10월) · 찾아가는 심리특강(하반기)
②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및 상담 역량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위원회(2월) · 상담 주제별 수준별 직무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의견 수렴(2월) · 상담 주제별 수준별 직무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설계 및 도입(4월~6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규채용자 각군 등에 배치(7월) ·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매뉴얼 작성(~9월)
③ 군 심리검사 효과성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심리검사 시행지침 시달(2월) · 간부 심리검사 자율기술형 문항 개발(3월~9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군 심리검사체계 운영 고도화 및 정책활용 방안 연구(~11월)
④ 예방적 차원의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도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살예방·정신건강 증진 통합위원회 구성(4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군 멘탈 트레이닝 프로그램 도입 추진(~12월)

③ - ②. 공백없는 대내·외 인권침해 구제절차 확립

□ 개요

- 군 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진정 및 구제에 대한 법제화 및 군인권보호관 제도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군 지원방안 구축

□ 현 실태

- 현재 군 내 기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, 진정사건 조사 및 구제 절차는 「군인권업무훈령」에 근거하여 시행 중이며, 법적 근거 부재
 - * 국방부 및 각군 인권상담 및 진정 건수(군인권지킴이 기준) : ('23년) 1,381건 / ('24년) 1,814건 / ('25년) 1,887건
-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인권위와의 이견을 조정*하려 했으나, 인권위의 부동의로 결렬되었으며('23. 12월),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 폐기
 - *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개최('23. 11월, 법제처 주관)
- 만료로 폐기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의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개정안(김병주 의원 발의, '24. 7. 10.)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

<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개정(안) 주요 내용 >

- 군 내 기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방법과 구제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
- 군 내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군 외부 구제절차(국가인권위 등) 이용 가능 명시
- 군 내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이용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규정

- '22년 7월 신설된 '군인권보호관'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군 사망 사건 통보, 조사·수사 입회 지원, 제도 홍보 등 지속적인 협력 필요

□ '26년 추진계획

- 군 내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에 대한 법제화 추진
 - 실무협의 등 소통을 통해 법률 개정 관련 쟁점에 대해 인권위와의 이견을 해소하여 입법절차 지속 추진
- 군인권보호관 제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협력 강화
 - 군인권보호관의 군부대 방문 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 시 협조,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·관리

○ **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강화**

- 훈련병 및 장병 대상 제도 소개 및 생활관에 안내자료(포스터 등) 비치

○ **국방부-인권위 공동 인권교육 기획·협력**

- 군인권교관 과정, 지휘관 인권교육을 인권위와 공동 기획·운영
 - * 군인권교관 과정 확대 운영(국방부: '25년 12회 → '26년 13회 / 인권위: '25년 1회 → '26년 4회), 지휘관 인권교육은 교육생 편의를 위해 원격교육 또는 다양한 지역에서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
- 격오지 부대에 대한 전문적 인권교육을 위해 민간 전문강사 지원
 - * 국방부 인권교육 민간강사로 지원 확대('25년 400개 부대 → '26년 500개 부대), 인권위 '격오지 군부대 찾아가는 인권특강' 실시(인권위 위촉강사 파견, '26년 60개 부대)

○ **군인권교육협의회를 통한 인권교육 개선 및 협업 강화**

- 국방부-국가인권위원회 공동 협의회,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각군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인권교육 개선사항 도출
- 인권위와 각군 간 군인권교육협의회 운영을 위한 근거*를 마련하였으며, 이를 토대로 인권위와 협업하여 각군에 대한 맞춤형 인권교육 지원 강화
 - * 국가인권위원회예규 「군인권교육업무지침」 제정 완료('25. 12. 18.)

□ **입법계획**

○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개정

* 군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 및 구제절차 등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

□ **추진 일정**

주요 내용	'26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군 내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에 대한 법제화 추진	•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률 개정안 협의(계속)	• 「군인복무기본법」 개정 추진 • 시행령 개정 반영(법률개정 완료 시)
② 군인권보호관 제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협력 강화	• 군인권보호관제도 운영·홍보 협조/지원(계속)	• 군인권보호관제도 운영·홍보 협조/지원(계속)
③ 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강화		
④ 국방부-인권위 공동 인권교육 기획·협력	• 국방대 인권교관 양성과정(2월~6월) • 국방부 인권교관 심화과정(6월) • 인권위 격오지 군부대 찾아가는 인권특강(5월~6월)	• 국방대 인권교관 양성과정(7월~12월) • 국방부 인권교관 심화과정(11월) • 인권위 격오지 군부대 찾아가는 인권특강(7월~11월)
⑤ 군인권교육협의회를 통한 인권교육 개선 및 협업 강화	• 군인권교육협의회(상반기, 6월)	• 군인권교육협의회(하반기, 12월)

3-③. 공정한 군 사법제도 운영을 위한 민군 협력관계 강화

□ 개요

- 일부 범죄의 재판권 민간 이관 등 군 사법제도의 환경변화에 따라 민·군 협력 관계 강화 필요
- 민·군이 연계된 체계적 사건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
-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강화 등을 위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 여부 검토 및 이를 위한 민·군 합동연구 실시 방안 검토

□ 현 실태

- 군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민·군 협력 필요성 지속 증가
 - * 2중 수사·재판 예방, 수사 관련 통보 등 상호 협력 필요
- 국방부 및 각군은 소규모 시스템을 개별로 운영하고 있어 체계적인 사건 관리가 제한되고, 민간과의 협력에도 한계
 - * 형사사법정보시스템(KICS)를 사용하는 민간 사법기관과의 협력 및 정보공유 제한
-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해 민간법원으로 재판권 이관, 국방부장관 소속 군사법원 설치 및 고등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원법 개정('22.7월부 시행)
 - *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조직의 특수성이 조화된 사법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기존 군 사법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일부 보완·개선

□ '26년 추진계획

- 수사협의회 운영을 통한 민·군 협력 강화
 - 「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 개정
 - * 군 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은 해양 관련 사건은 해양 경찰청에 바로 이첩하도록 함
 - 재판권 오류, 통보 누락, 징계업무 제한을 해소하고, 민간 사법기관의 군 사건 처리 개선 및 협력 방안에 대한 협의 추진
 - * 민간 이관범죄 현황 분석 및 성과 분석, 식별된 수사 개시 통보 누락 현황에 대한 교차검증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군 사법제도를 운영하고, 민간 사법기관과의 업무 협조체계 강화

○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 전면 시행 및 대국민서비스 강화

- 군형사 사법 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기록·관리업무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

* 구축사업 : '23. 12. 1.~'26. 1. 31.(223.65억원) / 안정화 : '26. 2. 1.~6. 30. / 전면사용 : '26. 7. 1.

- 군형사사법포털을 통한 형사사법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('26. 7. 1. 부)
- 군사법정보시스템 - 형사사법공동시스템(KICS) 연동

* 각 기관별 연동합의(경찰청 : '22. 9. 6. / 대검찰청 : '25. 7. 1. / 법원행정처 : '25. 6. 4.) 및 연계를 위한 내부시스템 구축 완료

- 체계 사용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사용자 교육

○ 군 사법제도 개선 관련 관계기관 의견조회

-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개혁 관련 의견수렴

* 각군 수사기관(군검찰, 군사경찰)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하고, 장병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 및 재판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군 사법체계 개혁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(각군 법무실, 국방부 및 각군 검찰단·수사단, 조사본부 등)의 의견수렴

□ 입법계획

○ 「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 : ~ '26. 2월

*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사건의 이첩 대상 기관에 해양경찰청이 추가됨에 따라, 사건 이첩기관, 관계서류 및 증거물 송부기관 등을 구체화

○ 「군사법원법」 개정 추진 : ~ '26. 12월

* 각군 수사기관(군검찰, 군사경찰)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 / 수사 및 재판절차 보완

□ 추진 일정

주요 내용	'26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수사협의회 운영을 통한 민·군 협력 강화	• 「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(2월)	• 민간 수사기관과 수사협의회 개최(9월)
②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 전면 시행 및 대국민서비스 강화	• 군사법정보시스템(기준 사건입력 기능 등) 시행(1월) • 군형사사법포털(군사법원 내의사건검색, 비실명판결문, 서비스) 시행(3월)	• 군사법정보시스템 전면사용(7월) • 군형사사법포털(사건정보, 통지서 조회, 민원신청 등 서비스) 시행(7월)
③ 군 사법제도 개선 관련 관계기관 의견조회	• 군 사법체계 개혁 관련 의견 수렴(~6월)	• 「군사법원법」 개정 추진(12월)

Ⅲ.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

4 양성 평등한 조직기반 강화

- 4 - ① 국방 양성평등 정책의 발전
- 4 - ② 일-가정 양립의 근무환경 조성
- 4 - ③ 현장 중심 성희롱·성폭력 예방 활동 및 피해자 보호 지원
- 4 - ④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활성화

4 - ①. 국방 양성평등 정책의 발전

□ 개요

- 정책기반 체계를 강화하고, 민·관·군 협력체계를 활성화하여 군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추동력 확보
- 조직 내 여성 참여를 확대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한 근무여건 지속 개선

□ 현 실태

- 국방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민간전문가의 자문 및 군 내 여성 참여를 통한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정책 발전 필요
 - *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정부위원회의 특정 성별이 치중되지 않는 노력 필요
- 군 간부 처우·복무여건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임획득 인원의 감소, 상위계급의 여군 점유비 감소 등에 따른 여군 점유비 감소 추세 지속
- 여성근무자 근무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성 관련 시설(여성화장실, 여성필수시설, 야외훈련장 화장실 등) 미흡에 따른 문제 제기 지속

□ '26년 추진계획

- 양성평등 정책기반 체계 강화 및 민·관·군 협력체계 활성화
 - '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' 및 분과별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요 양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협력·조정(연중)
 - * 양성평등위원회(정기 연 2회), 분과별 소위원회(필요시), 정책자문 및 교육자료 감수(수시)
 - 주요 법령, 정책, 사업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시행(계속)
 - '군 양성평등지표 조사' 시행(~12월)
 - * 지표구성(6개) : 차별 없는 인사관리, 일-가정 양립여건, 성희롱·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, 양성평등 근무환경, 성주류화
 - 국방 성인지 통계집 발간(~12월)
 - * 분야 : 성평등 기반, 인사관리, 일-가정 양립, 양성평등 교육 등

○ 조직 내 여성 대표성 강화 및 여군 인사관리 발전

- '26년 여군 인력확대 목표 14.1% 달성 추진(연중)
 - * '26년 신분별 확대 목표 : 장교 15.0%, 부사관 13.7%
- '중기 여군인력 확대 및 활용방안' 정책연구 추진으로 △ 여군인력 확대 목표 재설정, △ 임관경로별 여군 인력획득 실태 점검, △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는 여군 인사관리 및 복무여건 개선방안 등 정립
- 국방부 관리자급 및 정부위원회 등의 여성 참여 비율 확대(연중)
 - * '26년 : 고위공무원단 20.0%, 본부 과장급 48.1%,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: 40%

○ 여성인력 확대에 따른 근무여건 보장

- 여성인력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성화장실/여성필수시설 확보 추진(계속)
 - * 국방부 건설관리과, 각군 성폭력예방대응센터, 각군 공병실 협업
- 사용자 의견이 반영된 여군 피복류 보급 체계 개선
 - * 여군 치수표 개정(안) 시험, 여군 두상 고려한 방탄모 개선 등
- 열악한 군 야외 훈련장 화장실 개선 위한 시범사업 추진(육군, 해병대)
 - * '26년 시범사업 예산 : 약 33억원(육군 3,144백만원 / 해병 152백만원)

□ 입법계획 : 없음

□ 추진 일정

주요 내용	'26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양성평등 정책기반 체계 강화 및 민·관·군 협력체계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(4월) • 양성평등위원회 운영(소위원회, 정책자문 및 교안 감수 등) • 법령, 행정규칙에 대한 성별영향평가(계속) • 군 양성평등지표 조사 및 국방 성인지 통계집 발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(11월) • 국방 성인지 통계집 발간(12월)
② 조직 내 여성 대표성 강화 및 여군 인사관리 발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여군 인력확대 추진평가회의(2월) • KIDA 정책연구과제 착수토론회(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여군 인력확대 추진평가회의(8월) • KIDA 정책연구과제 최종토론회(10월)
③ 여성인력 확대에 따른 근무여건 보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여성화장실/여성필수시설 확보(계속) • 군 야외훈련장 화장실 개선 시범사업(~12월, 불가 시 연장) 	

4 - ②. 일 - 가정 양립의 근무환경 조성

□ 개요

- 군 특성을 고려한 일-가정 양립 지원제도 개선 및 일-생활 균형 실현 등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 검토
-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서비스 질 제고 추진

□ 현 실태

- 국가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에 더하여 군의 특수한 근무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제도 운영 중
- 저출산 위기극복 및 자녀돌봄 여건 확대 등을 위한 일-가정(생활) 양립 지원제도 지속 개선 필요
-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화된 군 어린이집 환경 개선 및 비품 교체 요구 증대

□ '26년 추진계획

- 군 특성을 고려한 일-가정 양립 지원제도 개선
 - 출산·양육 관련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일-가정 양립지원 제도 개선 지속 추진
 - * △ 3자녀 이상 당직근무 면제 대상을 전군 공통으로 남성으로 확대, △ 배우자 모성 보호를 위한 휴가 사용 범위 확대 등(병영문화혁신 지도방문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의견수렴 등 실시)
 - 일-가정 균형 실현 등을 위한 군 내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 검토
 - * 국가공무원은 시차출퇴근형·근무시간 선택형 등 탄력근무제, 재량근무제 등 다양한 유형의 유연근무가 가능하나, 군은 육아 목적의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만 적용 중
- 군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
 - 군 내 보육소요 등을 고려 보육취약지역 등에 군 어린이집 확충
 - * '26년 확충 계획 : 신축 2개소, 증축 1개소

- 노후화된 군 어린이집(10년 이상 경과)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
 - * '26년 환경개선 계획 : 7개소
- 군 어린이집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추진
 - * 시설 운영 실태 확인, 교직원 및 이용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

□ 입법계획

- 「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*」, 「군 어린이집 관리·운영 훈령**」 개정
 - * 배우자가 유산·사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가족 간호 목적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 등
 - ** 「영유아보육법」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

□ 추진 일정

주요 내용	'26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군 특성을 고려한 일-가정 양립 지원제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」 개정 · 군 내 유연근무제 확대 관련 각군 의견수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각군 의견수렴 결과 등을 감안하여 군 내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 검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유연근무제 확대 관련 국방인사정보체계 등 성능개선 실시 · 일-가정 양립 지원제도 개선 관련 의견수렴(병영문화혁신 현장 지도방문 병행) 	
② 군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군 어린이집 관리·운영 훈령」 개정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군 어린이집 확충(신축 2개소, 증축 1개소) · 노후화 군 어린이집 환경개선(7개소) ·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추진 	

4 - ③. 현장 중심 성희롱·성폭력 예방 활동 및 피해자 보호 지원

□ 개요

- 군 내 성폭력 실태 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·대응 정책 추진 및 피해자 통합지원 강화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
- 교육대상별 특성을 반영하여 성인지 교육을 다양화하고,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군 내 성인지 감수성 제고

□ 현 실태

- 국방부 및 각군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성희롱·성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정착
 - * 법규 정비, 제도개선 및 정책 지속 보완,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 및 피해자 보호지원 추진
- 딥페이크 성범죄 등 최근 사건 경향 및 관련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예방 교육의 실효성 향상 필요

□ '26년 추진계획

- 현장 중심의 성희롱·성폭력 예방대응 추진
 -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관련 법규 정비*, 자문기구(성폭력 예방대응 소위원회) 운영
 - *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등 관련 법규 개정 추진
 - : 성폭력 신고 범위에 피해자 보호지원 전담조직인 양성평등계선 추가
(입법 예고, '26.1월말 → 법제처 제출, '26.3월 → 국회 제출, '26.6월)
(필요 시 「부대관리훈령」 내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분야 개정 소요 검토)
 - 지휘관 주도의 예방활동 생활화
 - * 지휘관 수시 예방의지 강조로 경각심 제고 및 공감대 형성, 각종 부대활동(부대진단, 예방감찰, 설문, 계층별 간담회)시 식별 및 진단활동 병행
 - 야전부대 컨설팅팀 운영을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
 - * 상담·예방 교육, 예방활동/사건처리절차 등 이행실태 점검 등 패키지화 지원
 -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 강조기간 운영(연 2회, 하절기 및 연말연시)
 - * 지휘관 주관 특별 정신교육, 법규교육, 성희롱·성폭력 예방활동 이행실태 확인 등
 - '26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('26.7월~9월)
 - 「군 성희롱·성폭력 사례집」 제작·배포('26.9월)

○ 피해자 보호·지원체계 강화

- 사건처리절차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
 - *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여 임무 수행, 피해자 신상 및 사건 관련 비밀보장 엄수, 행위자·피해자 분리 및 신속·엄정한 사건처리
- 피해자 보호지원·사건처리관계관 직무역량 강화 및 심리소진 방지 추진
 - * 사건지원·처리관계관 대상 대외위탁교육 추진(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)
 - * 성고충전문상담관, 각군 피해자지원팀 및 사단급 이상 양성평등 담당자 대상 실무 직무역량 강화 및 심리소진방지 워크숍(군인권개선추진단 주관) 추진
- ‘국방 성폭력예방대응정보시스템’ 기능개선
 - * 상담/사건 기록물관리 Archive 체계 구축, DB분석을 통한 사건관리 및 피해자 지원 추진
 - * 기록물관리 매뉴얼 작성 및 훈령 제정
 - * 국방 1365 상담·신고앱 홍보(연중) - 현장 컨설팅 시 커피차 운영, 카드뉴스 제작 등
- 다각적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간 피해자지원 전문기관 협조 강화
 - * 외부 민간전문기관과의 협조체계 점검 및 군 내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 연계 지원(계속)
 - * 해바라기 센터,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MOU 체결, 협력 세미나 개최
-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안정 지원을 위해,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용품(스트레스볼, 마음일기 등)으로 구성된 ‘심리안정지원 키트(Kit)’ 제작·배포
 - * 성폭력 피해자 중 심리조력이 필요한 인원을 대상으로 시범 제공 추진(전반기)

○ 양성평등 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

- ‘양성평등소통 자치협의체(국직/장성급 부대)’ 운영, 자체 조직문화 진단/개선
- 야전부대 양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실태 점검(연중, 병영문화혁신 지도방문과 연계)
 - * 자치협의체 운영, 일-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실태, 부대원 대상 설문조사 등

○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

- 전 장병 및 군무원 대상 효과적인 성인지교육 실시(연중)
 - * 계급별 특성을 반영한 집중 교육(핵심주제 위주)
- 군 맞춤형 교육을 위한 강의인력 전문성 강화
 - * 군 전담교관 양성 교육 확대 실시(연중, 20개 기수 1,000명)
 - * 군 맞춤형 성인지교육 표준교안 제작·배포(12월)
 - * 전문강사 대상 군 특성을 반영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(4월)
 - * 우수교관/강사 선발을 통한 강의능력 증진 및 우수강의안 공유(하반기)
 - * 전문강사/전담교관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(하반기)
- 청년 장병의 특성을 반영한 몰입도 높은 교육자료 개발(연중)
 - * 웹드라마, 웹툰, 숏폼 등 MZ세대 미디어 소비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

□ 입법계획

○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43조(신고의무 등) 등 개정 추진

* 성폭력 신고 범위에 피해자 보호지원 전담조직인 양성평등 계선 추가

□ 추진 일정

주요 내용	'26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현장 중심의 성희롱·성폭력 예방대응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성희롱·성폭력 예방대응 지침 시달(1월) · 상반기 야전부대 현장 컨설팅 시행 · 하절기 특별 강조기간 계획 작성(6월) · 상반기 성폭력 예방대응 소위원회 · 「군인복무기본법」 개정 추진(6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하반기 야전부대 현장 컨설팅 시행 · 하절기 특별 강조기간(7~8월) · 연말연시 특별 강조기간(12월~27.1월) · 「군 성희롱·성폭력 사례집」 발간/배포(9월) · 하반기 성폭력 예방대응 소위원회 · (필요시) 「부대관리훈령」 개정 검토
② 피해자 보호·지원체계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건지원·처리관계관 직무역량 강화 교육 (연 12회, 4월~) · 심리소진방지 및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(4월 군 피해지원팀 사단급 이상 양성평등 담당 성고충상담관) · '심리안정지원 키트' 제작·배포(6월) · 국방 1365 상담신고 앱 홍보(연중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건지원·처리관계관 직무역량 강화 교육 (연 12회, ~12월) · 심리소진방지 및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(11월 성고충전문상담관) · 상담·사건 기록물관리 매뉴얼 제작, 훈령 제정(7~12월)
③ 양성평등 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각급부대 양성평등소통 차지협의체 운영(반기 1회) · 양성평등 조직문화 정착 실태 점검(연중) 	
④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문강사 직무역량 강화 교육(4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우수교관 및 강사 선발(하반기) · 전문강사/전담교관 역량강화 워크숍(하반기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 군 대상 성인지교육 실시(연중) · 성인지교육 콘텐츠 개발(연중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군 전담교관 양성 교육(20개 기수, 1,000명)

④ - ④.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활성화

□ 개요

-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징계위원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개선 방안 검토

□ 현 실태

- 군인·군무원의 성폭력 등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을 군인·군무원으로만 구성
 - * 징계절차 착수 이전에 개최되는 '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'의 위원 6명 중 2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, 현행 제도하에서도 징계위원회에 민간인 성폭력 예방·피해자 지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 가능

□ '26년 추진계획

- 성폭력 등 사건 징계위원회 운영 개선
 - 성 관련 사건 징계위원회에 의결권이 있는 민간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적절성 검토
 - *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민간 징계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「군인사법」과 「군무원인사법」 개정안이 발의(송옥주 의원)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

□ 입법계획

-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민간 징계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「군인사법」, 「군무원인사법」 개정안 발의(송옥주 의원, '24. 6. 20.)
 - * '24. 9. 23.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부, '26년 현재 계속 심사 중

□ 추진 일정

주요 내용	'26년	
	상반기 (1~6월)	하반기 (7~12월)
① 성폭력 등 사건 징계위원회 운영 개선	· 「군인사법」, 「군무원인사법」 개정안 국회 논의과정 참여	